

# 예비타당성조사 더 꼼꼼해진다... 면제기준·사후검토 개선

SOC·R&D 기준 500억→1000억 단계별 실무조정협의체 구성  
시급성 인정 사업 신속절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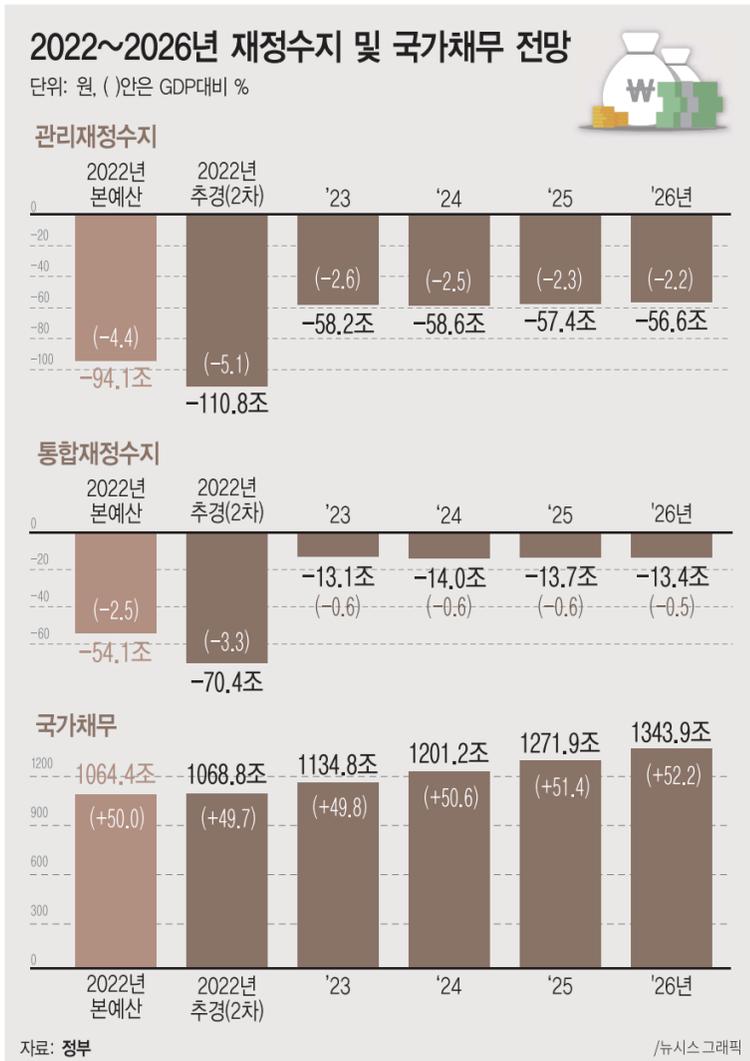
정부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서두르는 데는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자금을 대거 집행하면서 나라빚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바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해 나라살림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도 1000억원으로 높이고,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등 예타 제도도 개선한다.

## ◆나라빚 내년 1134조 이상...재정건전성, 법률로 명시

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재정준칙 도입방안에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등의 목적으로 5년 간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 나라빚인 국가채무가 누적돼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



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평균 8.7% 예산 증가율을 유지해 왔다. 당달아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증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 그리고 올해 1068조8000억원

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어 내년에는 113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섰고, 재정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더해 재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도 나라살림이 이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범위 내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향후 채무비율이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 채무 한도보다는 채무증가속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고령화에 따라 의무지출에 대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 없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뒤 필요시에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준칙 도입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예타 기준 1000억으로 상향...면제도 최소화

정부는 예타대상 사업도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999년 도입된 23년 간 유지해왔던 SOC·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예타 면제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적용한다. 예컨대, 현재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예타가 면제되는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타가 면제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꼼꼼히 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호화 공공청사 설립이나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또, 기재부 등 예타 주무부처와 조사수행기관 등은 예타 조사 단계별로 상시 협의·조정하는 실무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국회 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당초보다 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도 조사기간을 엄격히 지키고, 총 조사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청년·노인' 경제활동 ↑... 韓 노동공급 확대 주도

## 한은 BOK이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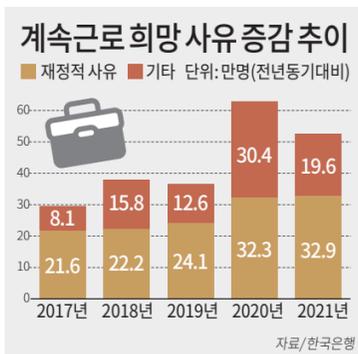
1인 가구·기대수명 증가 등 영향  
"시장참여 확대 위한 지원 강화해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도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층에 이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의 추세적 상승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했다.

최근의 경활률 상승폭 둔화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며, 개별 연령대의 경활률 상승은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2015년에는 핵심층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022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경활률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은 ▲고학력자 비중 상승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층 가구주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노동공급이 활발한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 상승(2015년 19.3%→2022년 상반기 22.1%)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학력자의 경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발한 가운데,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이 상승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의 증가(청년 가구주의 증가)가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금융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고령층의 경우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편 등)로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재정적 사유에 기인했다.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이 3분위로나 누어 보면, 2017~2021년 중 순자산이 많을수록 순자산이 더 많이 증가해 자산불평등이 확대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삼성전자, 주중 친환경 경영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RE100 가입  
직접·간접 배출량 합산 유력

삼성전자가 친환경 경영을 본격화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중 친환경 경영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RE100 가입 선언도 포함됐다.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점검을 받겠다는 의미로, 국내에서도 SK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가입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과 중국 반도체 사업장에서 RE100을 달성했고 멕시코 사업장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94%로 끌어올리는 등 성과

를 올린 상태다.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자 등이 가입 압박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월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주주서한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RE100을 미룬 이유 중 하나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실제로 국내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EUV 장비 확대 등으로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직접 탄소 배출량과 간접 탄소배출량 등을 모두 합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리튬 등 방법으로 제품 생애 주기를 모두 통틀어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방식이다.

/김재용 기자 juk@

